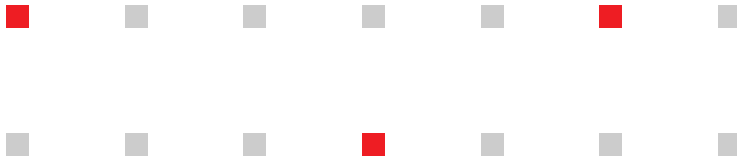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 개원 6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컨퍼런스



이번 호 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의 개원 6주년을 맞이하여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한·중·일 국제컨퍼런스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전북 농업의 도약과 활로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I. 농업, 이제는 변해야 한다
- II. 농·상·공 연계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 III. 전북 농업의 대중국 수출전략
- IV. 전북 쌀 산업의 도약과 성장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6월 7일 vol.42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 개원 6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컨퍼런스

I. 농업, 이제는 변해야 한다	3
II. 농·상·공 연계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5
III. 전북 농업의 대중국 수출전략	11
IV. 전북 쌀 산업의 도약과 성장	15

1. 농업, 이제는 변해야 한다

1. 전북의 농업이 살아야 한국의 농업이 산다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북연)이 지난 5월 26일 개원 6주년을 맞아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의 주제는 ‘전북의 농업’ 이었다. 농업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절실한 주제다. 전북에는 지금 새만금, 혁신도시, 성장동력산업 등 수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농업문제야말로 전북의 오랜 고통이자 새로운 기회의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산업적 전망에서 볼 때도 농업문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산업화의 진전이 점차 미래의 행복과 번영을 약속해 줄 수 없다는 시대인식 속에서 농업은 새로운 가치로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더 많은 희망과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인식과 재발견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농업과 농촌도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물론 지

금 이 순간도 전북의 농업과 농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기운은 강렬하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은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

이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한 국제컨퍼런스는 우리의 인식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모두 세 가지 주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는 최근 전북에서 농업과 농촌혁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모꾸모꾸형 농촌개발’의 사례에 대한 비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이 개원 6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한·중·일 국제 컨퍼런스’가 5월 26일(목) 전북대 진수당에서 김완주 도지사,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300여 객석을 가득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판적 검토였다. 이번 컨퍼런스의 최대 화제인물이 된 도쿠노 사다오는 발표를 맡았다. 그는 이미 한일 양국에서 상당히 알려진 열정적이고 뜨거운 학자이자 실천운동가이다. 그는 농촌사회학 전공자로서 농상공 연계의 전략의 비전과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걱정적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중국의 강소성에서 날아온 빠오중손 박사였다. 강소성 사회과학원의 농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국의 농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섯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마지막 주제는 전북의 쌀산업에 대한 것이었다. 전북의 쌀산업은 생산과잉과 낮은 시장가격이 서로 악순환되면서 농업·농촌·농민문제의 구조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다. 발표를 맡은 조가옥 교수는 쌀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공을 위해 카리스마적 농민경영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제시했다. 바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적이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 지적에 동의했다. 결국은 사람이 해내는 것이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는 그의 지적은 공공부문이 어떻게 농업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를 큰 틀에서 시사해주는 메시지였다.

많은 농학도들과 농민단체들이 컨퍼런스장을 지키면서 열심히 듣고 토론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더 많은 분들을 위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핵심적 문제들을 담아 이번호 이슈브리핑을 꾸몄다.

3. 국제컨퍼런스 후기

전북발전연구원이 처음으로 기획한 국제컨퍼런스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전 과정에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의 협력과 호의가 컸다. 강승구 국장은 행사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했고, 특히 행사가 끝나고도 도쿠노 사다오 교수와 거의 밤을 지새면서 토론을 했다.

또 많은 일정과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의 강완묵 군수께서도 컨퍼런스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완묵 군수의 열정과 성의가 임실군의 농업정책을 언젠가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도쿠노 사다오 교수는 농·상·공 연계, 즉 6차 산업의 성

II. 농·상·공 연계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우리보다 앞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상·공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 사례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발제 도쿠노 사다오(徳野 貞雄)(구마모토대학 교수)

좌장 송춘호(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 교수)

토론 안동환(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황영모(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1. 발제내용 요약 : 일본 농·상·공 연계의 과제와 방향

일본은 2008년부터 농·상·공 연계 촉진법 제정을 통해 농업-상업-공업 등 산업 간의 연계로 지역경제의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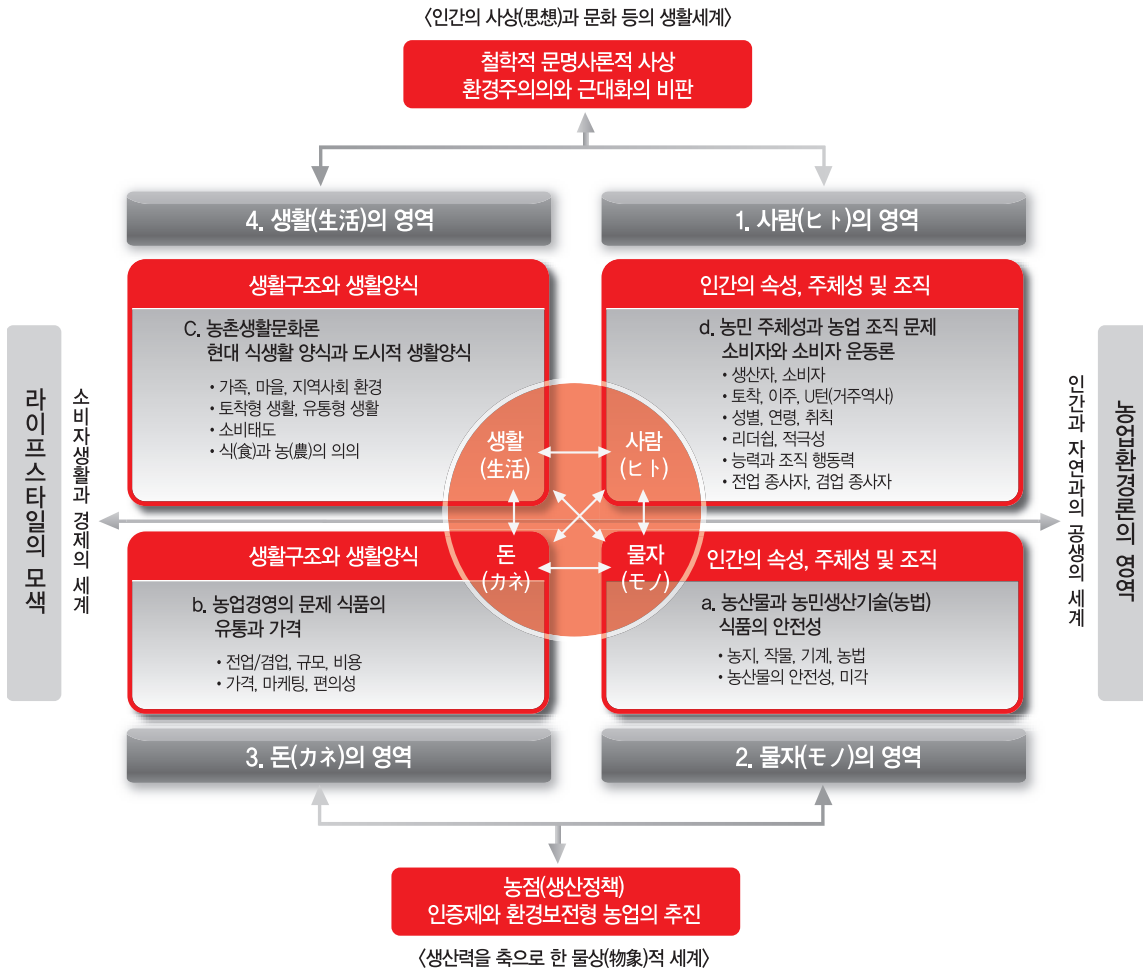
농·상·공의 연계는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또 상이한 측면이 많다. 이미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선형적 경험은 향후 정책추진과 실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농업·농촌, 생활농업론(生活農業論)의 관점에서 파악하자
지금까지 농학(農學)은 돈(カネ)과 물자(モノ)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을 파악해 왔다. 돈(金)의 영역에서는 가격, 소득, 시장, 보조금 등이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물자(物)의 영역에서는 농지, 작물, 기술 등이 관심사항이었다. 바로 생산력농업론(生産力農業論)적 파악이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농촌을 담당하는 생산자와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생활농업론(生活農業論)'이다.

생활농업론은 기존 생산력농업론 중심의 분석 패러다임을 사람과 생활의 영역으로 확장한 관점이다. 전통적인 농업 생산기술·생산물 중심의 물자 영역, 경영·소득·가격 등 생산력 중심 관점의 탈피를 강조한다. 그래서 농민의 주체성과 농업조직의 문제, 현대의 식생활 양식 등 이른바 사람(ヒト, 人)과 생활(生活)의 영역이 생활농업론의 핵심이다.

생활농업론은 농업기술, 농산물, 경영, 소득, 가격 등 이른바 전통적인 농업론(농학)을 탈피하여 사람과 생활영역을 중시한다. 이는 곧 농업·농촌을 파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생활농업론에서 파악하는 농업·농촌의 분석 관점〉



일본 농·상·공 연계의 배경과 목적¹⁾

농림수산업과 식품관련 산업은 지역에서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지역 차원에서 농림수산품의 새로

운 유통시장을 개척하고, 가공, 외식, 관광 등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1) 日本經濟産業省의 '農商工連携の推進(2010)'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

일본의 농림수산업은 90% 이상을 5대 대도시 이외의 지방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력이다. 그렇지만 일본 내 식품관련 수요(74조엔) 가운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에게는 식품관련 가치의 13% 수준밖에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다.

그렇다보니 농림수산업은 소득의 감소, 고령화의 심화, 새로운 담당자가 늘지 않는 등 심각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또 지역의 상공업은 독자적인 노우하우와 기술 등을 축적하고 있지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상업, 공업의 연계는 각 산업부문의 절박한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농·상·공 연계를 통해 지역단위 경영자원을 융합할 수 있고,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취업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개척과 전문 농업 경영법인의 육성이 가능하다. 6차 산업화를 지향하는 사업자간의 연계와 경쟁을 통해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유통·판매·가공·식품·관광)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뿌리를 둔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은 90%

이상을 지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수요의

13%만이 생산자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농림수산품의

새로운 유통시장을 개척하고,

가공, 외식, 관광으로 고부가 가치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일본 농·상·공 연계의 현황과 한계

일본 농·상·공 연계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새로운 생산 및 판매방식의 개발,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지역주민·소비자 단체 등과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농·상·공 연계는 농업자 주체의 6차 산업화와 달리 비농업적 사업자(기업)의 농업부문 신규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생산자 주도의 6차 산업화(モクモクファーム, ぶどうの樹, シュシュキのこの里 등)와 달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책의 주체는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과 경제산업성(格上産業省)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인해 농업·농촌을 지나치게 경제적 영역으로 파악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측면에서 실체가 부족한 행정(경제산업성)의 개념적 창작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상·공 연계는 농업자 주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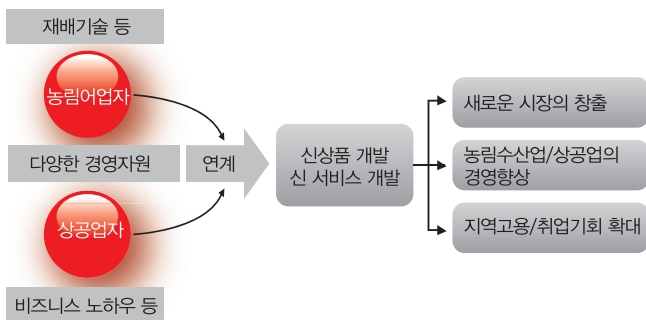
6차 산업화와 달리

비농업적 사업자(기업)의 농업부문으로의

신규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 주도의 6차 산업화와 달리
 구체적 실적이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실체가 부족한
 행정의 개념적 창작물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농·상·공 연계의 기본개념〉



자료 : 産業經濟省, 農商工連携の推進, 2010.

농·상·공 연계 성공의 열쇠, 카리스마적 농민경영 (주체)에 달려 있다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 및 농·상·공 연계가 최근 한국에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의 활성화 모델



로 소개되는 사례는 각각의 여건과 환경,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case by case) 성공요인을 유형화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로 농·상·공 연계 또는 6차 산업화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는 일본의 직매소(直販所)는 매출규모 40억엔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유지도 힘겨운 상태이다.

그러나 활성화된 사례에서는 농민리더 또는 경영자의 헌신적 노력과 전문성(카리스마적 농민경영)이 성공의 가장 큰 동력임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모쿠모쿠 농장이다. 단순히 성과를 창출하니까, 이를 모방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해당 사례에서 주체(리더)가 어떠한 역량과 노력으로 그러한 성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 정책사례의
 한국적용은
 신중히 해야...

활성화 사례의 모델링, 유형화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농상공 연계의 성공열쇠는
 운영주체(농민경영)의
 전문성과 헌신에 달려있다.
 이를 카리스마적 농민경영으로 부른다.

〈일본 농·상·공 연계 및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정책비교〉

구분	농·상·공 연계	농산어촌 6차 산업화
목적	농상공 연계 촉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원 활용으로 고용확보와 소득향상
개념	상류(농림수산업)→하류(상공업)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
근거	농상공 연계 촉진법, 기업입지 촉진법 개정	6차 산업화법
시기	2008. 5 공포	2010. 12 공포
부처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지원	저리융자, 세제우대조치 등	무이자, 보조금 지원 등

* 일본 農林水産省, 6次産業化の生産性向上に係る調査報告書(2011), 産業經濟省の農工商連携の推進(2010)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정리자가 요약 정리

2. 주요 토론내용

농·상·공 연계는 그동안의 실천사례를 정책적으로 체계화한 것



농·상·공 연계는 지역산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노력을 체계화하는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우리도 향토산업 육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역연고자원화 등 농·상·공 연계와 유사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시행

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농·상·공 연계와 융합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는 정부 부처별로 따로 산재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메뉴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농·상·공 연계 정책의 시사점, 우리와는 정책 환경이 달라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 분명 일본은 정책추진의 환경과 배경에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와 연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기간의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법

률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비즈니스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

지역경제에 밀착한 주체의 참여, 농·상·공 연계 성과를 지역으로 귀속 시킨다

우리의 농정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규모화 된 전업농 육성과 이를 위한 유통체계의 혁신, 식품산업



〈일본 농·상·공 연계의 유형 및 참여주체〉

유형분류	참여 및 주도 주체
농축수산물 활용 신상품 개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주식/유한회사, 생산자협의회, 협동조합
새로운 서비스 제공	주식회사, 상공회의소, 협동조합, 농협 영농부회
새로운 생산방식·판매방식 개발	주식/유한회사 농업조합법인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	주식회사, 재단/사단법인, 상공회의소, 협동조합
지역주민,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품목연구회, 주식회사, 상공회의소, 농협 영농부회, 농사조합법인

자료 : 農林水産省·經濟産業省, 農工商連携 88選 事例一覽, 2008.

과의 연결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역자원이 가치화·상품화 된다하더라도 현대와 같은 시장독점구조 아래에서는 시장실패가 작동하여 그 가치가 외부 기업에게 유출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밀착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향토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일본의 사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우리의 농·상·공 연계 추진, 주체별 역할이 모아진 지역농업의 역량 강화가 관건



농·상·공 연계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최종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

가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R&D)를 매개로 각 주체, 부문별 역할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지원과 함께 생산자 스스로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농업의 역량이다.

III. 전북 농업의 대중국 수출전략

농산업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농산업 분야의 수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발제내용 요약 : 강소성과 전라북도의 고부가가치 농업 협력방안

한·중·일 3국의 농업은 모두 소규모 영농체제로 농산물 관세, 인건비, 농산물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FTA 체결이 가져올 타격은 중국보다 일본과 한국에 더 클 것이다. 농업문제는 한중일 FTA 체결의 우선과제이자 주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과 강소성 간의 농업협력은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인적 자원으로도 모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 농업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발제 包宗順(包宗順)
(강소성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장)

좌장 양병우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토론 정화영 (로스피아 대표)
정운용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장)
이성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소성은 1차산업 생산성이 매우 낮고, 지역간 발전격차가 크게 나타나..

강소성의 면적은 102,600km²로 대한민국 면적(100,033km²)과 유사하며, 전라북도 면적(8,061km²)의 약 13배에 이른다. 2010년 1인당 GDP는 8,146달러, 강소성 총 GDP는 6,235억 달러이다. 생산액 기준으로 1차 산업은 6.2%, 2차 산업 53.2%, 3차 산업 40.6%이며, 종사자수 기준으로 1차 산업은 25.1%, 2차 산업 35.7%, 3차 산업 39.2%의 비율을 보

〈표〉 2010년 강소성 경제·사회 발전 주요지표

구분	강소성	소남(%)	소중(%)	소북(%)
토지면적(km ²)	10만2600	27.30	19.86	52.84
경지면적(ha)	469만	19.92	23.04	57.04
GDP(위안)	4조903억3400만	60.45	18.54	21.01
1차산업 GDP (위안)	2539억5900만	24.92	24.33	50.76
양식 총생산량(톤)	3235만1000	14.75	25.13	60.12
식용류 총생산량(톤)	151만9700	18.29	36.44	45.27
면화 총생산량(톤)	26만800	3.09	28.07	68.84

자료 : 강소성 경제·사회 발전 통계지표, 강소성 통계연감, 2010

이고 있어 1차 산업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강소성 중 소남, 소중, 소북 지역의 농토가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 23.0%, 57.1%이다. 강소성에서 50%이상의 경지가 소북지역에 분포해 있다. 양식, 식용류, 면화 등의 총 생산량 비율이 소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북지역은, 경지면적 비율이 57.1%인 반면, GDP 비율은 21.0%로 소남, 소중에 비해 지역발전 격차가 크다.

전북 농업의 강소성 시장 진출은 식품(가공)부문을 고려해야..

강소성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이 컸던 2009년에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68%에 달했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식품부문의 경우, 강소성 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2000~2009년에 강소성 전체 수입에서 식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0.3%이었고, 수출에서의 비중은 평균 1.8%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30여년간 강소성 내 식품소비가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북의 강소성 내 시장 진출을 위한 틈새시장으로 식품분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강소성에 투자한 항목은 4,219개이며, 이 중 농업 및 식품가공 항목은 317개로 7.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농업 및 식품가공 항목 중 실제 투자액 비율은 농림목축어업이 57.6%, 식품제조업 20.7%, 농부산물 가공업 12.3%, 음료제조업 5.7%순이다. 아직까지는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강소성 내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향후 강소성과 전라북도의 농업부문의 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강소성 내 식품 수출입 비중은
전체 수출입에서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강소성 내
식품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북 농업의
강소성 진출은 식품분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강소성과 전라북도 고효율 농업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 후 처리기술에서의 협력〉

강소성 농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강소성 내 곡류와 식용류 특산품이 31개, 임업 특산품이 20개, 수산물 특산품이 26개, 과일·채소·차·화초 특산품이 79개, 축산물·주류가 38개, 기타 특산품이 75개가 있다. 그러나 강소성은 농산물 생산 후 처리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산물 냉장·신선보관·포장·운수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한다면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

〈농업기계 생산 및 사용기술에서의 협력〉

강소성의 고효율 시설농업 분야의 기계화 수준이 매우 낮아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손에 의존해 작업하고 있는데, 2차, 3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도시나 공장으로 떠나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효율 시설농업의 인건비 압박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북과 강소성이 농기계 생산 및 사용기술 분야, 특히 채소와 원예 시설농업에서 농기계 생산 및 운용기술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면 그 잠재력이 매우 클 것이다.

강소성의 농촌은 현재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의 고령화와 더불어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부족하고
또 비싸지는 사람을 대신해
작업할 농기계를 생산하고
고효율 농기계에 대한
사용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효율 농업투자와 마케팅에서의 협력〉

최근 몇 년 간 강소성은 농업생산의 조직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농촌토지집체소유제는 고효율 농업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 내 자본력을 갖춘 투자자는 대부분 농업기술과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업기술과 경영을 이해하는 사람은 투자할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내 상황을 보았을 때 농업기술에 대한 대만 투자자가 많은 편이며 한국 투자자는 적다.

고효율농업에 대한 투자 외에 강소성-전라북도는 고부가가치 농산품 마케팅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농산품 수출입기업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강소성의 농산품을 전북에 알리고, 한국기업 역시 관련기구를 통해 강소성에서 한국제품을 홍보하는 것이다. 또 양측이 개최한 농산품 혹은 식품박람회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연구 협력〉

전북은 정책적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또 농산품 마케팅 방식, 농산품 품질기준과 기술, 신품종 재배 기술이 발달했다. 이 점은 강소성이 배우고 참고할 만한 부

분으로 농업보호 및 지원정책, 농산품 마케팅 서비스 시스템, 농산품이력시스템, 바이오기술 실용화 등 농산품 품질 기준과 기술의 응용 등은 연구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관 간의 교류협력〉

양측의 협력은 대학, 연구원, 정부관련 부처를 통해 추진할 수 있지만, 관련업계 협회 등 민간기관을 통한 교류가 더 중요하다. 강소성 농산품수출입기업협회는 강소성에서 농산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사회단체,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단체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소성과 전라북도의 민간기관이 고효율 농업협력 강화를 위해 튼튼한 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북과 강소성의 유사 기관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더 넓고 깊은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요 토론내용

고급·안전 식품으로서의 한국식품 포지셔닝 필요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소비유행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급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베이징올림픽, 상하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식 위주의 품질이 좋은 식품 구매 수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강

기능성 위주의 고품질 식품 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브랜드 육성을 통한 중국시장 주도품목을 개발하고 수출농식품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강소성 내 인프라 활용해야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강소성 내수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2·3선 도시를 주력시장으로 설정해야 하며, 강소성 소재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중국 현지내에서 중국 노동력을

활용하고 협력생산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 전략을 참고하여

전북은 농업기계, 원예 분야 등의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과 강소성의 SO전략 강화해야



강소성의 약점은 농산물 생산 후 처리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기계화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반면 전북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IT 농기계클러스터 조성 등이 강소성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점요인이다. 즉, 국가식품클러

스터는 농산물의 전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농산물 생산 후 처리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냉장·신선보관·포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 되려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T 농기계융합센터의 기술을 활용해 소북지역에 고효율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연구협력이 필요한 시점

한·중 수교를 맺은지 19년,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상호 협력을 위한 관계를 맺은지 17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론적인 협력방안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협력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강소성 내 수출입 품목에 대해 국가별, 년도별 추이에 대한 조사 외에 중국내 농산품에 대한 주요 소비층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전북 농산품의 대중국 수출방안을 각론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전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과 정읍방사선육종센터 등의 도내 농업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소성과의 R&D 부문의 협력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빠오쑤손 소장은 한국 농업을 온실속의 화초로 비유하고(중국은 한국과 달리 정부의 보조금이 매우 적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생산능력을 제고시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지원 필요



공공부문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인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농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공품, 신선농산물 등의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중국 강소성 내의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시장진

출 품목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는 통관, 검역, 대금결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IV. 전북 쌀 산업의 도약과 성장

FTA 충격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농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농업의 주력을 차지하는 쌀 산업의 도약과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발제 조가옥(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유통학과 교수)

좌장 강수기(원광대학교 부총장)

토론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1. 발제내용 요약 : 전북 쌀 산업 발전방안

한·중·일 3국의 농업에서 식량작물은 농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식량작물에서

쌀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에서의 경제적 비중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쌀 농업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쌀 산업 발전은 국가적으로도 식량자급도 유지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농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유통, 가공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라북도는 농업수입에서 쌀의 비중이 43.1%로 전국평균의 1.7배..

전라북도의 경지면적은 2010년 현재 203,899ha로 전국 경지면적 1,715,301ha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쌀 재배면적은 134,123ha로 전국의 15.1%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대비 쌀 재배면적의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1.4배 정도 높다. 이와 함께 농가 수입 중 쌀 비중이 가장 큰 농가는 57.0%로 전국에서 충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전국 평균 45.0%, 1위 충남 59.2%, 3위 전남 50.6%).

전라북도 쌀 생산농가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으며, 농가수입에서 쌀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2010년 현재 전라북도 농가수는 109,447농가로 전체농가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5.0ha 이상

의 대규모 농가는 7,174농가로 전국대비 17.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대농의 비율이 높다.

전라북도는 농업총수입 중 쌀의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나, 2009년 현재 43.1%로 전국 평균 24.5%에 비해 1.7

배 정도 높다. 특히 전라북도 서부평야 지역(김제, 익산, 군산, 부안)의 경우 농업수입에서 쌀의 비중이 80~9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경제에서 쌀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도별 농업총수입 및 미곡수입의 변화

(단위: 천원)

구분	2003			2005			2009		
	농업 총수입	미곡 수입	미곡 비중(%)	농업 총수입	미곡 수입	미곡 비중(%)	농업 총수입	미곡 수입	미곡 비중(%)
평균	23,611	8,049	34.1	26,496	7,264	27.4	26,621	6,522	24.5
경기	26,045	8,831	33.9	29,665	8,150	27.5	24,785	6,824	27.5
강원	22,537	7,042	31.2	25,546	6,242	24.4	27,834	4,297	15.4
충북	22,411	6,490	29.0	23,184	6,720	29.0	23,309	4,496	19.3
충남	25,176	9,772	38.8	28,688	9,754	34.0	31,583	7,766	24.6
전북	24,207	13,166	54.4	23,972	11,580	48.3	26,044	11,226	43.1
전남	22,982	9,738	42.4	24,824	7,546	30.4	23,404	8,716	37.2
경북	23,551	6,870	29.2	27,123	6,105	22.5	28,690	5,529	19.3

자료 :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각년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의 감소와 생산비의 증대로 쌀 수익성은 하락

쌀 생산량은 약간의 진폭은 있으나 안정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대하고 있다. 풍작일 경우에도 10a당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992년 461kg→1997년 518kg→2009년 530kg), 특히 흉작일 경우에도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93년 418kg→2003년 441kg→2010년 483kg).

쌀 가격은 생산량과 연동하여 진폭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노동력 투입시간은 생력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1980년 92.8시간→ 1991년 51.6시간→2002년 27.0시간→2010년 16.1시간), 동력사용시간도 1990년대 이후 농기계의 대형화에 의해 기계투입시간이 감소하고 있다(1980년 4.0시간→1991년→ 11.2시간→ 2002년 8.9시간→2010 4.8시간).

전라북도 농업에서 쌀 비중은 떨어지고 있으나 2009년 현재 농업총수입의 43.1%를 차지해 농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라북도 서부평야지역은 쌀의 비중이 농업수입의 80~90%에 달해 농가경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의 감소와 생산비 증대로 쌀 농업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어 생산, 유통, 가공을 연계한 쌀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쌀 소비현황은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1980년 132kg→2000년 94kg→2009년 74kg), 현재 추세라면 2015년에는 65kg, 2020년에는 60kg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생산비 증대로 쌀 농업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어 생산, 유통, 가공을 연계한 쌀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라북도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친환경·기능성 전면 전환〉

전라북도의 쌀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북 쌀을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쌀 생산면적을 적절히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쌀 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현재 14.2% 수준인 고품질·친환경·기능성 생산비중(고품질 4.2%, 친환경 5.0%, 기능성 5.0%)을 2015년에는 전라북도 쌀의 45%수준(고품질 20%, 친환경 12.5%, 기능성 12.5%)으로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쌀 생산비용을 20%까지 절감〉

고품질·친환경·기능성 위주의 재편과 더불어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노력이 병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들녘별 경영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들녘단위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시설이용과 공동작업을 확대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생산비감축기술을 개발할 경우 전북 쌀 생산비용은 2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RPC 규모화와 RPC 중심 파워브랜드 집중 육성〉

전라북도 RPC(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저장시설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 비해 부족하다. 이와 함께 영세한 RPC

및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RPC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영세한 RPC를 통합하고, RPC별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 쌀 가공 차별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39개소인 RPC를 약 20개소로 통합하여 RPC를 중심으로 전북 대표 파워브랜드 20개를 선정·육성해야 한다.

〈쌀 가공산업 육성〉

현재 정부는 R&D와 융복합을 통한 쌀산업 혁신촉진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주요한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도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북 쌀 가공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진 RPC의 가공산업과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가공에 적합한 원료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쌀 가공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위한 '대규모 전북 쌀 산업문화 체험장' 조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쌀 산업발전 산학연관 협치체계 구축〉

위의 과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체인 시·군, 도 단위에서의 수평적인 산학연관 협치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은 정책수립과 예산을 지원하고, 농업기술 연구교육기관은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대학은 현장중심의 연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쌀 생산과 마케팅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주요 토론내용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쌀 가공산업 육성해야



쌀 공급과잉의 문제는 결국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수요를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방법이다. 지금까지 쌀 수요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 산업적 접근에서 수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타 도에 비해 쌀 농업을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가공, 외식 등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식품수요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두 번째는 생산측면에서 전라북도는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지금 대규모 농업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만금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한 쌀 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적인 그림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북 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과거에는 호남쌀이 경기미에 비해서 상당히 품질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 품종개량, 영농방법 등이 많이 개량되어 품질이 전국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수도권 소비자들이 경기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현재 호남쌀이나 충청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천쌀, 여주쌀, 김제 쌀 등을 대상으로 식미테스트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식미테스트 결과를 보면 전북 쌀의 밥맛이 경기미 밥맛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미테스트나 품질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전북 쌀의 우수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쌀 농업을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하다.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대규모 농업생산이 가능한 새만금과 연계한 쌀 산업 육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품질·친환경·기능성 쌀 비중은 수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제시된 전략 중 핵심은 전북 고품질·친환경·기능성 쌀 생산을 2015년까지 45%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고품질 쌀의 생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일반 쌀에 비해 20~50% 이상의 가격수취가 가능해야 한다.

많은 국내·외 사례를 보면 고품질 농산물시장은 매우 높은 성장세이긴 하지만, 초과공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친환경 쌀을 급격하게 확대한 타 시·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품질 농산물 소비의 가장 큰 장애는 높은 가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치인식, 태도변화가 핵심이지만, 소비자의 태도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품질 쌀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전략은 수요성장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단기간에 고품질 쌀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기 보다는 소비자 태도변화를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산학관연 협치체계가 구축되어야



제시된 전략은 정부 주도하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와 농가를 선택하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RPC를 선택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십 가지나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사업에 새로운 보조금과 저

리용자금 정책이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결국 예산수요를 증대시키면서 시장경쟁 구조를 왜곡시키고 교란시켜 경쟁력 있는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좀 진부한 주제일 수 있지만,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지자체 수준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최근 농협개혁, 농업회 의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기존 쌀 산업 경쟁력 대책을 평가하고,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산학관연 협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